

文 유엔총회연설 '국제사회 책임' 방점

작년 연설은 北변화 촉구
"비핵화 결단 올바르단 걸
확인해줘야... 평화 견인"

지난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올해엔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즉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한 만큼 그에 따르는 국제사회의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 돼야 계속해서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연설에 스며있다.

문 대통령은 2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다.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핵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것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으로서 "결자해지" 차원의 책임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스스로를 고립과 불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로 만들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연설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가 의사를 밝히는 신년사로 화답했다.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을 합의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세부 이행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조치를 했으나,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내세우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숨가쁘게 진행된 이러한 과정을 연설문에 빠짐없이 담아냈다. 잊혀진 영광과 환희의 순간을 상기시켜 지속적인 평화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다"며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됐다"고 언급했다.

68년 이상 유지돼 온 기형적인 한반도 정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연결시켰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68년 동안 정전 상황이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특정하는 대신에 '관련국'이라고 지칭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 회담을 앞둔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함을 연설에 녹여 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따를 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이라며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 평화로 나아가 용기를 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시작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뉴시스

해경 공직기강 문란 '쇼크'

박주현, 관리체계 책임론 제기
16세 폭행·강간미수까지 심각



계속 증가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16세 카페 여직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간하려고 한 폭행 및 강간미수,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해양경찰청의 조직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까지 징계인원은 전년도 징계인원의 96%에 달하는 등 갑질에 성매매까지 매년 증가하는 비위에 대한 해경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관리체계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된 후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신설됐다.

27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52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음주운전 115명, 직무태만 115명, 기타범죄 106명, 청렴의무 위반 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금품·향응수수 등 4대 고비난성 비위가 증가했다.

성범죄는 2013년 2건에서 2016년 3건, 2017년 6건, 2018년 8월까지 7건으로

매 앞선도 발생했다.

갑질은 2017년 5건, 2018년 8월까지 5건으로 총 10건이 발생, 이와 별도로 4건의 갑질 피해 민원이 처리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의경에게 개인 침실청소, 휴가 복귀 시 지역특산물 요구 등이다. 특진으로 승진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금품수수도 발생했다.

박주현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재신설된 해경은 4대 비위 등 공직기강 문란자에 대한 일벌백계제를 통한 위상 재정립과 국민신뢰감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며, "2017년 해경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4등급으로 2016년, 2015년 3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한 조직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수입 없이 안되는 우리나라 스마트공장

장비 상당수 해외수입 의존
산업부 R&D 예산 되레 줄어



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주요장비의 상당수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선진국 대비 뒤쳐져 있음에도 정부는 스마트 공장 R&D 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보급 확대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장비 국산화 현황자료와 주요국과의 스마트공장 기술력 비교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주요장비인 PCL(컨트롤러), 센서, PDA 중 PCL과 센서의 국산화 비율은 각각 30%, 10%에 그쳐 일본 미쓰비시와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의 장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용 센서, 로봇 등 스마트 공장 핵심 기술의 일부는 선진국 대비 40%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핵심 부품과 기술을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스마트 공장 R&D 지원에

가부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 예산(구축지원, 생산현장디지털화, 지역특화산업육성)은 2016년 600억원, 2017년 767.25억원, 2018년 1276.0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R&D 예산은 2016년 109.45억원, 2017년 94.74억원, 2018년 5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스마트 공장 R&D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15.4%, 2017년 11%, 2018년 4.4%로 급감했다.

조배숙 의원은 "스마트공장의 주요장비는 외산에 의존하고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공장의 현재 공급구조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이 국내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靑 업무추진비 의혹 '선긋기'

"심야·주말 사용, 규정 어긋나지 않아"

청와대는 27일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내 에나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



서도 "11시 이전이나 주말에 사용한 것은 내부 규정상 어긋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정상 업무시간 외에 모두 2억4504만원 상당을 사

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시간대에 231건 4132만8630원,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1611건 2억461만839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